2018년 활동

기자회견문 모음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전 화 033) 732-1102
팩 스 033) 744-5642
홈페이지 http://www.wonjukfem.or.kr
주 소 (220-952) 강원도 원주시 돌터2길 11 2층
문 의 김경준 사무처장 010-5373-4670

2018년 1월 15일 | 총 1매 |

취 재 요 청 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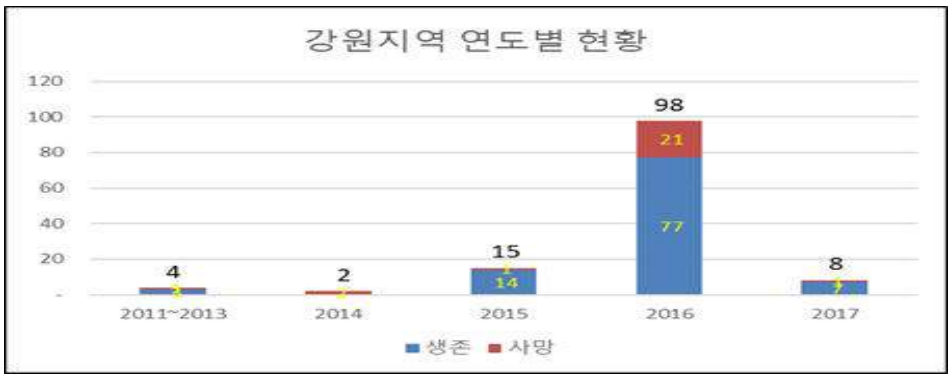
○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는 강원도 4개지역 환경운동연합의 협의체입니다.

○ 강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현황을 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에서 발췌하여 발표합니다.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합니다.

○ 2017년 12월 말까지 강원지역의 피해자 신고는 127명이며, 이중 20%인 26명이 사망하였다. 2017년에 신고자 수는 8명이며 이중 1명이 사망하였다.

○ 2017년말까지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자 수는 5,955명이며 이중 22%인 1,292명이 사망하였고, 2017년에는 614명이 신고하였고 사망자 수는 614명이다. 제품사용자는 전국적으로 350~500만명으로 추산하며 사용 후 병원치료자는 30~50만명이다.

○ 전체 보고서(환경보건시민센터 보고서 303호)를 요청하시면 메일로 전송합니다.



○ 2017년도 신청인 월별 현황(강원)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계
소계	1	2	1	-	-	1	-	-	-	2	1	-	8
사망	-	-	-	-	-	-	-	-	-	-	1	-	1
생존	1	2	1	-	-	1	-	-	-	2	-	-	7

환경보건시민센터/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환경운동연합강원협의회

[기자회견문]

원주에너지주식회사는 도대체 누구겁니까?

존경하는 원창묵 원주시장님.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사업주체인 원주에너지주식회사는 도대체 누구겁니까?

어제 2월 1일 원주시장님은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한다고 밝히셨습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 시장으로서 시민이 원하지 않는 발전소를 포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와 시의회 의견을 존중한다고도 하셨습니다. 그 역시 때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발언에 원주시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지난 8년간 끊임없이 이어져왔던 말 바꾸기의 연장이었고 오만의 극치였으며 원주시민에 대한 기만일 뿐입니다. 시민을 시정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정치와 행정의 대상으로 여기는 그 태도는 문재인정권에서 규정한 적폐의 모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본인의 원주시장 3선 가도의 최대 걸림돌이 자신의 오만과 불통에서 비롯되었음에도 의회와 시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짜뉴스에 현혹되었다고 하며 아기를 안은 채 나선 시민들의 소망을 왜곡하였고 시민의 분노와 저항을 불러일으킨데 대한 겸손한 반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원주에너지주식회사는 누구 것입니까?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사업의 진퇴를 누가 결정합니까? 원주에너지주식회사입니까, 아니면 원주시장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원주시장은 이 사업의 진퇴를 결정할 아무 권한도 의무도 없습니다.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킨다면 원주시장이 아닌 사업권을 가진 원주에너지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 원주시민 앞에 사업포기를 분명하게 천명하여야 합니다.

그간 원주시장님은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는 화훼관광단지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라고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2013년 5월 24일 화훼관광단지 SPC의 출자금 3억을 위해 원주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면서 원주시장님은 화훼특화관광단지와 열병합발전소를 분리 추진하겠다 하셨습니다. 더불어 4년여 넘는 기간 동안 토지매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화훼관광단지 사업은 실질적인 사업의 실패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열병합발전소의 반대로 인해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핑계와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쓰레기열병합발전소도 대한민국 전 국민들과 시장, 군수들까지 인체에 위해한 연료의 사용으로 거부하는 상황에서 왜 혼자 안전하다고 '양심을 걸고' 주장하십니까. 2018년 1월부터 서울과 수도권 13개 시와 전국 6개 광역시에서 이 쓰레기고형연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제화 되었습니

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2천억이라는 비용이 드는 쓰레기발전소 건설 대신 돈 한 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연료 값도 더 저렴한 LNG등을 사용한 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원주시장님은 악성쓰레기연료만을 수년째 고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원주시민들은 쓰레기발전소의 건설이 화훼관광단지를 빙자한 핵심 사업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시의회에서 반대해서 사업의 추진을 포기했으니 시의회에서 대안을 내놓고 책임을 지라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망각하고 시의회를 묵살하는 것이며 이들을 선출한 전 원주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시민에 대한 협박이며 편협하고 비겁한 무책임의 극치라 단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원주시장님이 시민과 의회와 한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고 은폐하고 왜곡해 왔기 때문에 원주 시민들의 신망과 믿음을 상실하였고 스스로의 안녕을 위한 시민의 저항을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라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면, 열병합발전소를 이후로는 거론하지 않고 건설포기에 따른 후속조치에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렵게 마련하신 자리를 시민에 대한 기만극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온 것을 저희는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범대위는 출범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진정 새로운 원주의 건설을 시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4만 전 원주시민들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건강권 사수와 원주의 정체성 회복을 위해 쓰레기열병합발전소 건설 결사저지 투쟁에 더 가열차게 나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굳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2018년 2월 2일

원주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원주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논평]

원주에너지(주)의 김영만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원주에너지(주)의 김영만 전 대표가 2월 6일 원주경찰서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원주화훼관광단지 지구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자 15명에게 땅을 사전분양해 10억여원을 챙긴 혐의라고 한다.

김영만씨는 문막쓰레기열병합발전소를 추진하는 원주에너지(주)의 대표이면서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PC의 대표였다. 분양사기라는 혐의를 받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본력이 부족한 김영만씨가 원주시의 비호를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했던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원주에너지(주) 김영만 대표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다.

원주에너지(주) 김영만 대표의 긴급체포로 문막 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추진도 국면이 변했다. 사기꾼 기업에 문막화훼단지사업도, 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를 맡길수 있는 정당성 자체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원주시는 사실을 직시하고 원주시장의 쓰레기(SRF)발전소 포기선언에 대한 실제적인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2018년 2월 7일

원주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결의문]

원주시장은 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를 말로만 포기한다고 하지말고
쓰레기발전소 백지화를 위한 실제적인 행정조치를 즉각 취하라

원주시장이 쓰레기(SRF) 열병합발전소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반대하는 시민의 목소리와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우리는 말로만 포기한다고 하지말고 실제적인 행정조치를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행정조치는 없다,

원주시장은 원주시민을 어리석은 원숭이 취급을 하고 있다. 본인의 입으로 원주에너지(발전사업자)가 주도하는 일이기에 원주시가 간섭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몇 번이나 밝혔으면서 본인이 포기한다고 말하면 마치 사업이 백지화되는 것처럼 원주시민을 우롱하고 있다.

원주시장은 재임기간 8년 내내 쓰레기(SRF) 발전소에 대해서 몇 번이나 말을 바꾸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 최근에 한 거짓말은 쓰레기발전소에서 내뿜는 매연이 “영화관 같은 실내의 공기질 수준”이라는 말과 “쓰레기 발전소 굴뚝에서 미세먼지가 대량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다면 전문가를 불러서 물어보라. 쓰레기 발전소 굴뚝의 매연이 미세먼지를 발생시키지도 않고 영화관의 공기수준인지 말이다. 원주시장은 자신의 무지를 탓하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원주시장은 미세먼지와 나쁜 공기 때문에 살기 힘들다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가뜩이나 미세먼지로 힘들어하고 걱정하는 엄마들과 시민들에게 말로만 쓰레기 발전소를 포기한다 하지말고 백지화하는 행정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시장의 모습이다.

우리는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과 각 정당에 쓰레기(SRF) 열병합발전소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질의하였다. 상당수의 입지자와 정당이 아직도 답변하지 않고 있다.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 아직도 답변하지 않는 입지자들과 정당을 규탄한다. 원주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쓰레기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은근슬쩍 넘어가려는 입지자들과 정당들은 시민의 심판을 피해가지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원주시장과 정치인들이 쓰레기발전소를 두고 정치놀음하지 말 것을 경고한다. ‘정치적 목적’을 운운하는 원주시장이나 쓰레기발전소를 양산하는 법을 바꿀 생각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 모두 정치적 야욕을 버리고 쓰레기발전소 백지화를 위해 전심전력으로 노력하라. 이것이 시민의 목소리다.

건강도시 원주를 꿈꾸고 노력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아이들의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를 반

대하고 깨끗한 공기를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삶과 아이들의 삶을 위하여 쓰레기발전소 백지화를 요구하는 우리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전력을 다 할 것을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원주시장은 쓰레기 발전소를 말로만 포기하지 말고 즉각 백지화하라
2. 원주시장은 시민들의 건강을 위하여 문막화훼단지 쓰레기발전소를 백지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라
3. 지방선거 입지자와 정당은 쓰레기발전소 찬반 입장을 밝혀라

2018년 2월 24

쓰레기(SRF)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성명서]

김기선국회의원-원창묵원주시장간의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TV토론회를 인정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 문제에 대하여 김기선국회의원과 원창묵 원주시장이 G1 방송국을 통해서 1:1 TV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한다.

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원주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방선거가 임박해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두 사람의 TV토론회를 반대하며 금번 TV방송토론회를 인정한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하지 않은 선거사무를 통해 지방선거 후보자 중의 한 명인 원주시장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하는 잘못을 자행했기에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한다.

문막화훼특화관광단지 SRF열병합발전소는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이다.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대부분의 입지자들이 출마의 변에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을 정도로 뜨겁고 민감한 사안이기에 입지자들의 찬반 입장은 지방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원주시장은 지방선거에 임박해서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시민과 시의회가 반대했기에 포기한다는 말로써 아직도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고 찬성한다는 입장이라고 판단한다.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해야 할 선거사무를 원주시장 후보자 중 한사람에게 변명과 추진이유를 주장할 수 있는 TV토론회를 인정함으로써 모든 후보자에게 공정해야 하는 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는 후보자 중의 한명에게 절대적인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G1방송은 공정해야 할 방송의 임무를 저버렸다. 이는 공익적인 방송을 자사의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TV토론회를 당장 백지화하여 방송의 공익성을 회복할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문막화훼단지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과 활동을 진행한 김기선 국회의원에게 촉구한다. 지방선거 국면에서 단체장 후보와 1:1 TV토론회는 쓰레기(SRF)발전소 백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입장이기에 토론회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선국회의원과 원창묵 원주시장간에 1:1 TV토론회를 중단시키는 것이 공정한 선거사무이며, 오히려 선거기간 중에 쓰레기(SRF) 발전소에 대한 단체장 후보자들의 입장과 해결방법을 묻는 선거방송을 주관하는 것이 마땅한 임무라고 판단한다.

- 우리의 요구 -

1. 원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김기선국회의원과 원창묵 원주시장간의 1:1 TV토론회를 중단시키고 엄중한 선거사무를 진행하라.
2. 김기선 국회의원은 원창묵 원주시장과의 1:1 TV토론회 추진을 중단하라.
3. G1 방송국은 김기선국회의원과 원창묵 원주시장과의 1:1 TV토론회를 중단하여 공정성을 회복하라.

2018. 3. 8

쓰레기(SRF) 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문]

원주시장은 쓰레기(SRF)발전소 포기선언에 따른 백지화 후속조치를 즉각 취하라
SRF가 친환경에너지? 경유차 70대 분량? 허위사실 유포,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다

원주시는 여전히 고농도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고 문막쓰레기(SRF)발전소를 추진하는 사업자는 강행추진 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원주시장에게 쓰레기(SRF)발전소를 포기했으면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아직까지 원주시장의 후속조치는 없다. 오히려 방송토론회에 나와서 쓰레기 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양이 경유자동차 70대 분량이라고 했다. 그래서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없을 것이란다.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LNG로 운전하겠다 한다.

우리는 원주시장의 입장에 대해서 한마디로 후안무치한 언사라고 평가한다.
첫째, 쓰레기발전소의 사업자가 따로 있는데 권한도 없는 원주시장이 시민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SRF운행을 중단하고 LNG로 바꾸겠다 한다. 그래서 우리는 또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다. '원주에너지는 누구겁니까?'
둘째, 문막 쓰레기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양이 경유 자동차 70대 분량이라 한다. 우리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경유버스를 포함하여 최소 3,900대 분량이며 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차의 경우는 262,285대(300일, 24시간 기준) 분량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셋째, SRF가 친환경에너지라고 한다. 우리나라 법전을 뒤져봐도 SRF가 친환경에너지라는 법조항은 없다. 있다면 폐자원에너지라는 말뿐이다.
우리는 시민을 우롱하는 원주시장의 후안무치한 언사와 행동을 더이상 두고볼 수 없다. 그래서 원주시장을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처벌을 요구한다.

SRF열병합발전소저지를위한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는 지방선거 출마자와 정당들에게 쓰레기(SRF)발전소에 대해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물었고 60여명의 대상자 중에 30여명만 답변을 했다. 우리는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쓰레기(SRF)발전소 추진에 대해 찬반 입장이 없는 더불어민주당에 재차 입장 표명을 촉구하였고, 을 지역위원회는 "특별한 해가 없다고 해도 시민들이 심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답변을 보내왔지만 갑 지역위원회와 대다수 더불어민주당 시도의원 입지자들은 입장을 보내오지 않았음을 밝힌다.
원주시장이 소속된 정당이기에 입지자들과 갑 지역위원회가 눈치를 보고 있다고 판단한다. 마치 원주시민보다 원주시장을 더 두려워 하는 꼴이라 한심하기 짝이 없다. 백성이 하늘인 줄 모르는 정치인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우리는 찬반입장이 없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원주지역 7개 정당에 쓰레기(SRF)발전소 반대입장의 현수막을 게첨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오늘부터 7개 정당의 현수막이 거리에 내붙었다.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을지역위원회에도 쓰레기(SRF)발전소 반대입장 현수막을 게첨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정당이 반대하고 모든 입지자들이 반대하면 당연히 문막쓰레기(SRF)발전소는 백지화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원주시장은 포기선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우리는 문막쓰레기(SRF)발전소가 백지화되는 날까지 싸울 수 밖에 없다. 미세먼지 걱정에 아이와 부모를 모시고 있는 우리네 가정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당장에 깨끗한 하늘을 바라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노력이 더 더러운 하늘과 공기를 만들지 않을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요구한다. 원주지역의 모든 정당과 정치인은 문막쓰레기(SRF)발전소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지 말라. 원주시장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시민의 눈치를 살피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는 것을 각인하기 바란다.
우리는 원주시장의 문막쓰레기(SRF)발전소 백지화 후속조치가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이것이 시민의 명령이라고 판단한다.

2018. 4. 4

문막쓰레기(SRF)열병합발전소 저지를 위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의견서]

구룡사 진입로 개선 및 확장공사(공원계획변경 건) 의견서

- 단체명 : 원주환경운동연합
-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돌터2길 11, 2층
- 연락처 : 대표번호 033-732-1102 / 자연생태팀장 김은지 010-9357-2018

구룡사 진입로 확·포장은 과거 수차례 있었습니다. 그 당시 확·포장의 목적이 국립공원 보전 측면에 위배되고 있었고 지금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국립공원 보전과 매우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의 보존의 의무는 모든 국민에게 있고, 구룡사와 그 신도들도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좀 더 편하고, 빠르게 이용하겠다는 것은 국립공원 지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공원계획변경이 진행되게 되면 자연훼손(수목, 하천, 토양 등)과 차량증가로 인한 대기오염,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원주환경운동연합은 구룡사 진입로 개선 및 확장 공사를 위한 공원계획변경을 반대합니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지역 환경단체 지방선거 환경정책 제안 – ①]

미세먼지 대책, 미봉책으로는 건강도시, 청정한 공기를 꿈꾸기 어렵다

1. 대기환경 분야의 진단

① 미세먼지 – 최근 5년간 절반이 미세먼지(pm-10)의 농도가 50㎍/㎥이 넘었다.

원주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수준이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관측된 미세먼지의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치인 50㎍/㎥을 초과한 날이 5년간 절반이 넘는 936일 이었다. 또한 5년간 원주시 미세먼지(PM-10) 평균은 57㎍/㎥이었고 서울의 경우는 46㎍/㎥이었다. 즉 원주시는 1년의 절반을 선진국 기준치 이상의 미세먼지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미세먼지는 굴뚝이나 연소로에서 배출되는 1차 발생물질(배출가스)과 공기중에서 화학반응을 통해 2차로 발생한다. 2차 생성은 주로 자동차 등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과 석탄 등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황산화물이 원인이며 1차에 비해 2차의 비중이 2/3를 차지하고 있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1].

원주시 미세먼지 1차 발생량은 대략 300톤 내외이며 이 중 자동차와 중장비 등 도로이동오염원이 86%를 차지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2차 발생원인인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과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2014년에 13,90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발표된 원주시 미세먼지 대책은 통학차량은 LPG로 220대 교체하고 전기자동차 250대 보급, 노후버스 80대 교체와 물청소를 하겠다고 한다. 차량이 15만대가 넘는 현실에서 앞으로 5년 동안 자동차 550대 정도를 교체하는 미봉책일 뿐이다.

원주시가 발표한 저감대책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차 발생량의 1/300정도인 1톤 내외 밖에 안된다[3]. 시민들을 상대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다.

② 문막SRF 열병합발전소 – 미세먼지 발생량이 경유차 70대 분량이라는 것은 허위사실이다.

원주시장이 문막SRF열병합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양이 경유차 70대분량이라고 했는데, 이는 미세먼지 발생원인 조차 모르는 무지한 발언이다.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발전소 굴뚝에서 나가는 먼지량 만으로 계산하여 미세먼지 양을

---

1) 미세먼지, 도대체 뭘까?, 환경부, 2016. 4

2)

CO	NOx	SOx	TSP	PM10	PM2.5	VOC	NH3	BC
3,220,770	4,571,800	310,961	161,223	155,345	137,441	3,706,559	1,568,867	85,939

자료 출처 : 국립환경과학원(http://airemiss.nier.go.kr), 2014년, kg

3) 노후경유차의 경우는 250대 분은 배출량(경유승용차 0.084kg/대, 년)은 미미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교체는 발생량에서 제외했음. 통학용 경유버스(5.5kg/대, 년) 220대 분량은 5년간 약 1.1톤임

줄이는 언어구사로 원주시민을 우롱하였다. 실제로 원주에너지의 계산방법대로 관리기준을 적용하면 먼지의 양은 하루에 대략 11kg이 발생하지만 질소산화물은 275kg, 황산화물은 87kg 정도가 배출되어 연간 100톤 내외의 미세먼지 유발물질이 발생하게 된다[4]. 당연히 문막SRF 열병합발전소의 미세먼지의 양은 몇 배 이상 증가할 수 밖에 없다.

③ 대중교통 정책이 없다 – 시내버스에 대한 증차와 증액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미세먼지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인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은 늘어나는 자동차 증가로 인해서 매우 특별히 관리되어야 한다. 원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16만대를 넘어서고 있다. 늘어나는 자동차에 대한 대책은 대중교통 체계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자동차 사용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대책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원주시 인구가 27만명 정도일 때 시내버스는 196대가 운행했지만 인구가 34만명이 넘는 현재에는 161대가 운행하고 있다. 더군다나 표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변경되면 원주시 대중교통 문제는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게 된다.

원주시민의 절반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는 미세먼지 대책, 대기오염줄이기,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주민 삶의질 제고 등 시민의 삶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시내버스의 증차없는 버스노선 개편을 앵무새처럼 되뇌이고 있다. 현재 상태에서 대중교통의 혁신적인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결국 시민의 삶은 지금의 악몽같은 상황을 되풀이할 수 밖에 없다.

④ 유해화학물질 – 우리를 위협하는 유해화학물질 발생량이 너무 많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유해한 화학물질 64종을 관리하고 있다. 이 중에는 발암물질인 페놀, 자이렌, 벤젠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주시에 소재한 기업에서 신고된 유해화학물질은 2015년에 440,982kg이었다. 특이한 것은 서울시의 유해화학물질 발생량이 64,340kg으로 원주시보다 매우 적다는 것이며 문막에서 발생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원주시 전체 발생량의 8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5].

---

4) 대기오염 배출기준은 상식적으로 법적인 기준(예시, 먼지 20㎍/㎥)을 따르는데, (주)원주에너지의 경우는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기준(예시, 먼지 3㎍/㎥)을 따르면 배출가스가 줄어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주에너지의 주장대로 관리기준을 적용해서 계산한 결과이다. 참고로 환경부가 제시한 관리기준을 위반했다고 법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없다.

5) http://icis.me.go.kr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원주지역 환경단체가 제안하는 대기환경분야 정책제안]

1. 미세먼지 대기오염 배출물질을 줄여야 한다

① 대중교통이 혁신적으로 변해야 한다

- 버스노선 순환노선 개편, 간선버스 도입, 통학버스의 직선화, 마을 순환버스 도입 등
- 시내버스 증차와 보조금의 합리적 증액
-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시민감사제도의 도입
- 시내버스 불편 및 서비스 개선 시민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② 자동차 통행량을 줄여야 한다

- 시내 주요도로(원일로, 중앙로, 평원로)의 속도제한
- 시민적 합의를 근간으로 차량운행의 제한(10부제 or 5부제)의 도입

2. 미세먼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 대기오염 측정망의 확대
- 미세먼지 발생원인 추적조사 추진
- 가로숲으로의 질적인 변화 추진과 생활권역 주변에 나무심기 추진
- 날림먼지 사업장의 피복 및 중점관리의 추진
- 중부권(서울, 경기, 강원, 충청북도) 미세먼지 줄이기 행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 수도권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에 원주시 포함 추진
-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운동의 전개와 시민교육 추진

3. SRF열병합발전소의 가동중단 및 백지화 해야한다.

4. 대기오염 배출원의 엄밀한 관리를 추진해야 한다

- 유해화학물질 배출원에 대한 시민모니터링 등 시민감시 추진
- 화학물질 바로알기(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조례 제정

2018년 5월 16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아이쿱생활협동조합

[성명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복원 약속을 이행하라

산림청은 말로만 복원 운운하지 말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서 복원계획을 통과시켜라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표류하고 있다.

시작은 평창 동계올림픽 중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 유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바로 이어서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보류 결정하였다. 복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잠깐의 시간동안 가리왕산을 활용하자는 강원도와 정선군, 스키업계의 주장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은 2017년 12월 생태복원계획을 확정하였다.

2014년 10월에 동계올림픽이후 가리왕산을 복원을 위해 강원도, 정선군, 산림청, 환경부, 전문가, 주민,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만들고 4년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평창동계올림픽 경기 전인 2017년 12월에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을 생태복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첫째, 가리왕산을 생태복원 방향은 훼손전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경기장으로 훼손된 모든 면적을 복원한다. 셋째, 경기장의 인공시설물인 곤돌라를 포함하여 지상구조물 모두를 철거한다고 결정하였다. 그런데,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가 참여한 생태복원추진단의 결정을 번복하였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라면 원칙과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가리왕산 복원과 관련한 예산은 복원설계와 종자채취를 위한 10억원도 되지 않는다. 복원설계 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의 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예산은 한푼도 수립하지 않은 것이다. 2018년부터 가리왕산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보류되면서 산사태 등 재해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올림픽 경기를 위하여 산 전체를 파괴하였고 재해를 대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재해의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에 경기장 바로 하단부에 위치한 호텔 2동을 산사태 등 재해에 노출시키고 있다.

가리왕산 활강경기장은 애초 숙박시설이 없이 계획하였다. 주경기장에서 30분 이내에 모든 경기시설을 짓기 때문에 숙박시설이 필요없다고 결정되었다. 그런데 올림픽지원위원회가 올림픽 숙박시설을 100실 내외의 최소규모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하자 강원도는 보란 듯이 500실이 넘는 숙박시설 계획을 신청하였고 환경부의 제제로 300실 내외로 결정되었다. 호텔 중 1동은 동계올림픽이 끝난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았다. 올림픽 숙박시설의 설치는 지금도 그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숙박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지어진 숙박시설은 필요 유무를 떠나서 앞으로도 재해의 위험에 계속적으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을 통과시켜야 한다.

가리왕산 올림픽 활강경기장에 대한 활용화 주장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부정책을 결정하고 비용을 투입해야 한다. 돈이 없다고 복원을 시작하지 못한다는 강원도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국비를 투입하여 정부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 또한 대규모 산림복원사업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벌어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필요할 때마다 복원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강원도와 환경부, 산림청에 산재해있는 복원사업 기구를 통합해서 강력하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만들어야 한다.

약속은 소중하다. 더군다나 정치인이나 지방행정 수반의 약속은 더욱 지켜져야 한다. 가리왕산은 동계올림픽 이후에 복원하기로 약속했으면 당연히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산림청의 적절하지 못한 보류의 결정이 가리왕산 복원계획을 표류하게 만들었고 강원도의 활용화 주장에 힘을 실어준 꼴에 대해서는 명백한 책임을 묻는다.

우리는 우리나라 최고의 숲이 그것도 나라가 책임지고 보호해야 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자연생태계가 톱날에 잘려나갔던 처참한 상황을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통과되고 강력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는 장도를 시작해야 한다.

– 우리의 주장 –

1.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가리왕산 생태복원 약속을 이행하라
1.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는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을 통과시켜라
1. 산림청은 가리왕산 생태복원기구를 통합하고 강력한 복원사업을 추진하라

2018년 5월 17일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 :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010-5373-4670)

[지방선거 환경분야 정책진단 및 제안 - ②]

원주시는 개발이 아닌 보존중심의 도시관리 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부동산 부흥정책에 불과한 원주시 개발행정

2016년 1월에 발표한 지정면 일대 800만평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추진과 2012년부터 추진하겠다고 한 문막 궁촌리에 80만평 규모의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첫발조차 내딛지 못한 원창묵 지방정부의 대표적인 부실정책이며 부동산 부흥정책이다.

원창묵 지방정부는 취임부터 원주시를 공사장으로 만들었다. 공원을 만들겠다며 멀쩡한 산을 허물고 학성공원을 만들었고, 화훼특화관광단지를 만들겠다며 7년이 지난 지금까지 필요없는 SRF열병합발전소만 추진하고 화훼단지는 첫걸음조차 진행시키지 못했다. 취임부터 지금까지 개발계획을 발표한 것과 도시공원 아파트 추진, 그리고 남원주역세권 등을 합하면 천만평이 훨씬 넘는다. 이 과정에 원주시청에 대해 검찰의 압수수색이 수차례 이루어졌고 고위 공무원이 구속되는 등 지방정부의 책임자가 부동산 업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볼 수 있는 현실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도시의 빠른 팽창속도는 구도심 경제권의 퇴조를 불러왔고 준비되지 못한 도시의 팽창은 신도시 경제권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왔다. 구도심과 신도시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과정에 건설토목업자만 이득을 챙기는 모양새가 되어버린 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원주시는 2021년까지 약 32,000세대, 10만명 분의 아파트 건설과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누구를 위한 도시의 팽창이고 부동책 정책인지 걱정스러울 뿐이다.

캠프롱 토지대금 선납은 공원정책이 아니라 일방적인 헌납에 불과하다

원주시는 2016년 3월에 캠프롱 토지대금 665억원 전액을 선납했다. 이 중에 원주시 재정은 243억원이 투입되었고 공사비로 413억원을 계획하고 있다. 캠프롱 미군기지에 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2년이 넘도록 캠프롱 땅은 반환되지 않았고 언제 반환될 지 기약도 없다. 무리한 토지대금의 완납은 200억원이 넘는 원금에 대한 이자수익이 손실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주민복지 등 민생분야에 대한 재정투입이 어려워졌다. 이 과정에 원창묵 지방정부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통해 공원을 조성하는 전형적인 건설토목업자의 입장을 드러냈다.

중앙공원 1단계 사업은 공원일몰제 대비가 아니라 아파트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이다

2020년이 되면 공원이나 도로 등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해제된다. 공원이나 도로 등 계획만 있는 사유지가 해제되어 발생할 무분별한 난개발에 대해 원주시가 선택한 결론은 민간사업자에게 공원개발을 허락하고 공원부지의 70%를 돌려받는 민간공원 특례제도이다. 공원일몰제 초기대응 방안으로 일정부분 인정하지만 이 과정에 과도한 개발지향 정책은 문제이다.

문제는 원주시가 공원으로 환수되는 지역에 과도하거나 필요없는 공원시설을 요구하여 공사비용이

부풀려지게 되었고 민간사업자의 요구가 반영되어 과도한 고층아파트가 결정되었다. 해당지역은 교통대란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하락될 것이다. 옛 시청사 부지의 두진하트리움 아파트도 비슷한 경우이다. 38층까지 올라가는 초고층 아파트의 건설이유가 시청사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의 이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구도심 한가운데 원주에서 최고층의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다. 해당지역은 당연히 교통대란이 발생하게 될 것이지만 더욱 큰 문제는 옛 시청사 부지 주변의 주민들이 일조권과 조망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보게 되었고 앞으로도 수 십년 동안 환경권과 경제권을 상실하는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다. 정책의 우선 순위가 이미 살고 있던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건설사의 이득을 우선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론이 되어버렸다.

공원일몰제 대비, 건설업자적 관점을 지양해야 한다.

공원일몰제에 대비하는 전국적인 시민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020년에 현재 도시공원 면적의 50% 이상이 해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률개정 등의 다양한 방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이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원주시처럼 공원부지를 아파트 업자에게 헌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공원내 사유지가 공유지로 매입하면 사업부지에서 제외되는 것을 활용하는 방안, 도시공원 매입비용의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는 방안, 상속세의 40%의 감면 방안, 사유지를 임차하여 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등의 지혜를 모으고 있음에도 원주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헌납하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1군수지원사령부 부지에 30층 이상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계획을 4년 전에 확정할 필요는 없었다

홍수예방시설인 저류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1군수지원사령부 내의 부지 일부를 30층 이상의 초고층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확정한 것은 국방부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했다고 밖에는 할 말이 없다. 또한 이 과정에 건설업자의 이익은 당연한 결론이다. 후임 지방정부의 권한을 빼앗는 것은 물론이고 우산동 주민들의 치악산 조망권을 영원토록 상실하게 되는 정책이다. 2014년에 도시관리계획이 고시되었지만 아직도 1군수지원사령부는 이전되지 않고 있다.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염두한다면 상상할 수 없는 정책이다. 반면에 도시내 자연생태를 적절히 보전하고 이용가능한 토지개발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중의 하나인 도시생태지도(Bio-tope지도)는 민원을 핑계로 캐비넷에 사장되어 버렸다.

도시계획과 관리는 지방정부 최고책임자의 마인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원창묵 지방정부가 재임하는 기간의 원주시는 도시팽창과 도시개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주 주민의 삶보다는 건설토목업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50만명, 80만명의 인구를 유치하는 도시팽창 정책이 정주주민의 경제적인 상황을 어렵게 만들고 환경피해를 가중시켰다. 원주시는 도시팽창 정책에서 탈피하여 도시관리적 측면을 강화해서 경제적인 여건을 집중시키고 환경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책이 전환되는 것이 타당하다.

[정책 제안]

주민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의 수립

- 보존 중심으로 도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시 주민 설문조사 등 주민참여 방안의 다양화
- 도시팽창 정책을 지양하고 도시생태지도(비오톱)지도 활용 등 환경보전 우선 정책의 필요
- 1군수지원사령부를 3종 주거지역 추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폐기

공원일몰제에 대처하는 특별정책기구의 추진

- 공원매입 비용의 확보, 관련 조례의 정비, 시민참여와 교육 등을 추진하는 행정기구 구성
- 개발이익금을 공원매입 비용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기금의 조성

시민이 참여하고 생태가 살아나는 공원정책으로의 전환

- 캠프롱 미군기지를 시민들이 직접 조성하는 문화-환경 시민공원으로 추진
- 캠프롱 미군기지 토양오염 복원사업 착수
- 가로숲의 확대 조성과 어린이공원을 마을숲 공원으로 전환
- 도시공원을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헌납하는 정책 중단

2018년 5월 23일

원주환경운동연합, 원주녹색연합, 원주한살림생활협동조합,아이쿱생활협동조합

[기고글]

가리왕산의 생태복원, 약속입니다

평창동계올림픽 활강경기장이었던 가리왕산에 청와대 사회수석, 행정안전부 본부장, 산림청장, 강원도 행정부지사, 정선군수가 모여서 이번 폭우에 가리왕산이 입은 피해가 심각함을 확인하고 응구복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말 그대로 응급적이고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경기장 시설이라 폭우나 장마와 같은 재해를 대비하는 측면이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급격한 경사면을 토목공사를 통해 지반을 안정화해서 경기장의 흙이 비에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막아야 그 토양위에 식물이 살아가고 복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문제는 복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아서 응급복구에 투입되는 비용과 노력이 낭비될 수 있고 복원과 연계된 시공이 되지 않으면 지역주민과 경기장 하단부의 숙박시설은 계속적인 재해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시급한 복원계획의 확정과 추진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가리왕산을 활용하자는 주장이 경기장을 조성하기전부터 제기되었지만 마땅히 복원해야 한다고 결정한 이유는 가리왕산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라는 국가보호지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법은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보호지역을 해제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즉 가리왕산은 복원을 전제하지 않았으면 올림픽 경기장을 건설할 수 없었던 곳입니다.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식물의 유전자와 종(種) 또는 산림생태계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숲은 동종과 이종, 기후와 토양 등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고 있고 또한 살아있는 생태계이기에 유전자원과 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숲 전체를 보호지역으로 관리하는 이유입니다. 연구자에 의하면 가리왕산에 살고 있는 식물은 577종으로 강원도 전체 식물종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보호지역 내에 희귀식물 30종, 특산식물이 23종이며 곤충류가 325종이 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생태계의 보고이며 희귀식물의 자생지이기에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이유입니다.

5년 전, 산림청과 강원도는 올림픽경기 후 즉시 복원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환경부는 강원도로 하여금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을 구성하여 복원계획을 수립하게 하여 작년 12월에 복원계획을 결론지었습니다. 강원도, 산림청, 환경부,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은 가리왕산을 원래 상태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목표로 복원하며 경기장으로 파헤쳐진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복원에 절대적 장애물인 곤돌라 등 모든 지상구조물을 철거한다는 결정을 보았습니다. 무려 4년에 걸친 논쟁의 결과입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맘 다르다"는 속담처럼 평창올림픽 전에는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하던 강원도지사가 동계올림픽 중에 "2021년 동계아시안게임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가리왕산 복원계획이 표류되기 시작했고 강원도부지사는 산림청에 "가리왕산을 2021년까지 사용하고 복원하겠으니 국비를 지원해 달라"는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사용할 응구복구 예산도 작년에 책정하지 않은 강원도에게 응구복구 예산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강원도에게 최소한의 복원예산을 책정하게 하고 국비를 요청하는 자세를 요구하는 것이 정부의 온당한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경기장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보다는 전 세계인과 국민에게 약속했던 '경기 후 즉시 복원'이라는 이행과정을 통해 평화와 환경 등 올림픽 정신을 경기후에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올림픽 레거시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이 산림청 중앙산지관리위원회를 빨리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환경부, 산림청, 강원도에 산재해 있는 복원기구를 가리왕산을 관리하는 산림청이 중심이 되어 통합 운영해야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복원사업이 가능합니다.

[지방선거 환경분야 정책진단 및 제안 - ③]

환경단체가 진단한 원주시장 후보자 환경분야 공약평가

원주지역의 4개 환경단체는 '미세먼지를 중심으로 대기환경분야'와 '공원조성을 중심으로 개발행위'에 대해서 지난 원주시 행정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진단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①미세먼지 ②SRF 열병합발전소 ③대중교통 ④유해화학물질 ⑤대규모 개발행위 ⑥캠프롱 ⑦도시공원 일몰제 ⑧시가지내 초고층 아파트에 의한 시민의 환경권 배제 ⑨비오톱지도의 사장 ⑩도시계획의 방향을 중심으로 진단하였고 언급하지 못한 도시재생과 농업을 포함하여 12가지 분야에 대한 원주시장 후보자 공약을 검토하였다. 각 후보자가 발표한 내용을 4개 환경단체의 판단기준에 따라 [첨부-1]과 같이 재구성하였으며 후보자 별 공약을 환경적인 측면에서 장점과 단점으로 판단하였다.
후보자의 공약평가에 대한 환경단체의 원칙은 첫째, 원주시의 최대 환경현안인 미세먼지 문제와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공약 채택여부. 둘째, 12가지 현안에 대해 개발방향이 아닌 보존적 가치를 지향 여부. 셋째, 부동산 정책 중심의 개발 확대보다는 보존중심의 도시관리 정책 여부를 평가한다.

도시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상은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좌우한다. 원주시는 그 동안 여야를 막론하고 '건강도시'라는 정체성과 미래상을 지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에서 이러한 점을 두드러지게 볼 수 없었다. 이는 관리위주의 도시를 꾸려갈 것인지, 아니면 개발위주로 꾸려갈 것인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미세먼지 및 SRF열병합발전소,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대중교통의 혁신적 전환이라는 환경단체의 요구를 모두 반영한 후보자는 없었다. 다만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서 원경묵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공약이 구체적인 장점을 보였고, SRF열병합발전소 백지화 문제에 대해서 원창묵 후보가 다른 후보에 비해 백지화를 약속하지 않아서 단점으로 판단했다.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는 미래의 원주를 좌우하는 지표가 되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별도의 대응정책을 거론한 후보가 없었다. 시민단체들이 공원일몰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속세 감면, 공원의 매입을 위한 법제의 정비 등을 제안하고 노력하고 있음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원주천살리기, 쓰레기 줄이기, 캠프롱 복원 및 시민공원 조성 등의 환경현안에 대해서 후보자들의 공약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측면이다.
도시재생 및 농업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시도한 원경묵 후보의 공약이 다른 후보에 비해 장점으로 판단되며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접근도 원경묵 후보 외에는 발견할 수 없었다.

2018년 5월 31일

원주녹색연합,원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주환경운동연합

1. 미세먼지를 유발하고 각종 오염물질을 배출시키는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한 후보자 공약[6)]

	원창묵 후보	원경묵 후보	이상현 후보
SRF 열병합발전소	없음	백지화	백지화

* SRF열병합발전소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직접적으로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미세먼지 2차 생성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다량 배출시키기 때문에 원주의 공기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이러한 배경으로 SRF열병합발전소의 백지화는 마땅히 실현되어야 한다.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후보자 공약

	원창묵 후보	원경묵 후보	이상현 후보
미세먼지	○도시숲 지속적 확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도로 물청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단독주택 LNG공급 대대적 확대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기질 실시간 공개 ○공공시설유치원노인정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도심난개발 억제로 미세먼지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장소 지역별설치 ○도로 물청소 ○원주천중심 바람길 및 원주숲 만들기 ○라돈측정기 각 읍면동별 설치
대중교통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회전교차로 지속확대 ○인도와 건널목 턱 제거 ○주요교차로 조명시설, 자체발광 횡단보도, 중앙선 안전펜스의 확충	○버스노선의 전면개편 ○벽자마을순환 버스제도 도입 ○종합교통환승센터 추진 ○노선변경의 제도화 ○신도시 신규노선 및 도시내 순환버스 도입	○광역선과 순환노선 체계의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마을버스 사업을 청년일자리(협동조합)로 활용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

* 미세먼지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적 요인의 차단과 내부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있다. 외부적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중국과 수도권 발생원인을 차단시켜야 하는데, 원주 환경단체는 수도권 대기오염총량관리제와 연계, 그리고 광역단위 미세먼지 줄이기 행정협의회를 제안하였고 내부적 요인을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미세먼지 1차 발생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감소 또는 통행량을 줄이기 위해서 대중교통의 혁신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이러한 기준으로 보면 후보들 모두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본다. 단,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원경묵 후보의 공약이 돋보이며, 재임시 미세먼지 대책을 제시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는 원창묵 후보의 경우는 단점으로 판단했다. 또한 대중교통을 도시재생과 연계한 공약으로 보이는 이상현 후보의 폐철로의 도시철도 전환은 기존에 제시되지 않은 정책의 하나로 대중교통 정책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3. 공원 및 개발행위에 대한 후보자 공약

6) 원창묵 후보의 공약은 첫 번째 공약발표 기자회견문을 반영했으며 원경묵 후보와 이상현 후보는 선거사무소에서 보내온 공약을 반영하였음.

	원창묵 후보	원경묵 후보	이상현 후보
공원	○중앙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의 계속 추진 ○원주천 댐 주변 관광지 개발 ○문막공룡테마파크 조성, 간현관광지 확충	○가로수 숲의 조성 ○가로수 숲 시민위원회 구성	○중앙공원 등 도심공원 난개발 반대 ○원주천의 원주숲길 조성 ○원주도심 생태둘레길 조성 ○농업주제 테마공원 조성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공원 추진

* 2020년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는 후보자의 공약과 대안이 부재했기에 장단의 평가를 할 수 없다. 다면, 미세먼지와 도로의 소음 등 주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로수 정책을 가로수 숲 조성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원경묵 후보의 공약을 장점으로 판단했고 원주천 공약을 제시한 이상현 후보의 경우, 기존 원주시 정책과 '다름'을 찾을 수 없었다.

* 원창묵 후보의 경우 문제가 되었던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을 민간업자의 몫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계속 이행하겠다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도시공원내 과도한 초고층아파트 건설을 허락하여 주변 주민의 정주권과 환경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단점으로 평가한다.

4. 유해화학물질, 도시재생, 농업 등에 대한 후보자 공약

	원창묵 후보	원경묵 후보	이상현 후보
유해화학물질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아동교육환경 구축	○라돈측정기 각 읍면동별 설치
도시재생	○중앙선 폐철로 활용 관광자원의 개발 ○학성동 집창촌일대 도시재생 추진 ○봉산동 우물시장 낡은 건물 정비 ○마을기업 설립 및 지원	○원동성당·가톨릭회관 등 원도심의 문화유산과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화 추진 ○아카데미극장의 고전영화 및 인권영화관 추진 ○폐선활용 관광인프라 구축	○원도심지역 문화레지던스사업 추진
농업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 노력 ○권역단위 마을사업 확대지원 및 농촌중심지 활성활 사업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농업인 월급제 도입 ○청년농업인 지원 ○농·축·산림조합이 함께하는 지역농정 추진	○농업예산 10% 비중으로 인상 ○직거래 장터 활성화
기타(신재생에너지)		○반려동물 행복공원 추진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추진	○신규도심건물 및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원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적극 유치

* 원경묵 후보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도시재생, 농업 등의 분야를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한 것이 돋보이며 특히 반려동물 행복공원의 경우 다른 후보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동물복지를 언급한 장점으로 판단했다.

* 이상현 후보의 경우, 다른 후보자에게는 없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정책을 제시한 부분을 장점으로 판단하며 원창묵 후보의 경우, 재임시 제시했던 정책에서 진전되지 않았으며 봉산동 우물시장의 건물 정비와 같은 도시재생사업은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어 단점으로 판단한다.

[첨부-1] 지방선거 후보자별 환경관련분야 공약

		원창묵 후보	원경묵 후보	이상현 후보
환경 분야	미세 먼지	○도시숲 지속적 확대, 취약계층 공기청정기 지원, 도로 물청소,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단독주택 LNG공급 대대적 확대	○열병합발전소 백지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기질 실시간 공개, 공공시설·유치원·노인정 등에 공기청정기 설치	○SRF열병합발전소의 백지화 ○도심난개발 억제로 미세먼지 줄이기, 미세먼지 측정장소 지역별설치, 도로물청소, 원주천중심 바람길 및 원주숲 만들기 ○라돈측정기 각 읍·면·동별 설치
	대중 교통	○회전교차로 지속확대, 인도와 건널목의 턱 제거 등	○노선의 전면개편, 벽지노선 마을순환 버스 제도 도입, 종합교통환승센터 추진, 노선변경의 제도화, 신도시 신규노선 및 도시내 순환버스 도입	○광역선과 순환노선 체계의 시내버스 노선 재구축, 마을버스 사업을 청년일자리(협동조합)로 활용, 도시철도 체계의 도입
	공원	○중앙공원 등 공원조성사업의 계속 추진 ○원주천 댐 주변 관광지 개발 ○문막공룡테마파트 조성, 간현관광지 확충	○가로수 숲의 조성 ○가로수 숲 시민위원회 구성	○중앙공원 등 도심공원 난개발 반대 ○원주천의 원주숲길 조성, 원주도심 생태둘레길 조성, 농업주제 테마공원 조성,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공원 추진,
	기타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아동교육환경 구축 ○자전거타기 좋은도시 추진 ○반려동물 행복공원 추진	○신규도심건물 및 공공건물 신재생에너지 지원조례 제정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적극 유치
환경 외 분야		○중앙선 폐철로 활용 관광자원의 개발 ○원주역 부지 시티파크 조성 ○학성동 집창촌일대 도시재생 추진 ○봉산동 우물시장 낡은 건물 정비 ○마을기업 설립 및 지원 ○로컬푸드 직매장 확충 등 농산물 유통 활성화 노력 ○권역단위 마을사업 확대지원 및 농촌중심지 활성활 사업 추진	○농산물 가격안정제 및 농업인 월급제 도입, 청년농업인 지원, 농·축·산림조합이 함께하는 지역농정 추진 ○원동성당 및 가톨릭회관 등 원도심의 문화유산과 재래시장 연계 관광상품화 추진, 아카데미 극장의 고전영화 및 인권영화관 추진 ○간현관광지 확대, 폐선활용 관광인프라 구축	○녹색친화도시, GREEEN일자리 창출 ○유동인구 100만 광역시 대비 원주북부 제2터미널 신설 ○농업예산 10%비중으로 인상, 직거래 장터 활성화, ○원도심지역 문화레지던스사업 추진 ○중앙선 폐선 타당성 재조사

[원주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원창묵 원주시장 당선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하여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

원주시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원창묵 후보자가 당선되었다. 또한 원주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15명, 자유한국당이 7명이 당선되었다. 정치적 이해와 정당의 선호도를 떠나 지방선거의 결과는 원주시의 환경적인 미래를 매우 암울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는 미세먼지와 SRF열병합발전소였다. 또한 미세먼지의 해결과 시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의 혁신적 전환의 요구도 있었다. 하지만 원창묵 당선자는 SRF열병합발전소가 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며 시민의 건강과 상관이 없음을 선거기간 내내 강조하는 몰상식의 전형을 보여주었고 대중교통의 문제는 비용과 버스회사의 책임을 거론하며 외면하였다. 이로써 원창묵 당선자가 집권 내내 치중했던 대형 난개발사업인 SRF열병합발전소를 포함하여 중앙공원 2단계 및 캠프롱 공원화사업, 치악산케이블카, 백운산 풍력발전단지 등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미세먼지와 대중교통의 혁신적 변화는 해결의 단초를 찾기 어렵게 되었다.

원주시의회도 마찬가지이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환경단체의 문막 SRF열병합발전소 추진에 대한 찬반 입장표명 요구를 한 명만 제외하고 거부하였다. 이러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이 대거 입성한 원주시의회가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다는 희망보다는 SRF열병합발전소에 대해 8년동안 보여왔던 원창묵 당선자와의 야합과 기회주의적 입장을 지속할 것이 우려된다.

환경단체는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하여 SRF열병합발전소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원창묵 당선자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2차례에 걸쳐 참고인 진술을 하였다. 원창묵 당선자 측은 여전히 경유차 34대분이 발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는 경유차는 차종(경유승용차 – 0.084kg/년, 경유버스 – 5.5kg/년)별로 65배의 차이가 있고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2차 발생량이 1차에 비해 2배 정도 많다는 사실을 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피력하고 있다. 차종을 명시하시 않고 2차 발생량을 고려하지 않은 경유차 34대분량이라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축소한 허위사실이며 영향이 미미하다고 방송토론에서 얘기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었기에 검찰은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SRF열병합발전소 미세먼지 발생량의 왜곡은 전국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한다. 또한 허위사실에 대한 철저한 사법처리로 정부입장의 반영과 추후 발생의 여지를 원천차단해야 할 사안이다.

원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와 이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은 입장이 필요함을 밝힌다.

1. 검찰은 원창묵 당선자의 SRF열병합발전소 미세먼지 발생량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원주시는 시민의 환경권을 침해하는 중앙공원 2단계사업, 백운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대해 즉각 중단하고 시민과 함께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

3. 원주시의회는 SRF열병합발전소, 중앙공원 2단계사업, 백운산 풍력발전단지 추진에 대해 원창묵 당선자와의 야합을 중단하고 백지화를 결정해야 한다. 지난 지방의회에서 축소되었던 시민의 환경권 측면에서 대안수립을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4. 언론사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가 장기집권 하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봐주기'를 엄금하고 중립과 객관성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19일

원주환경운동연합

[의견서]

환경부는 치악산국립공원내 구룡사 진입도로 확장 요구서를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업의 타당성을 증명하지 못한 공원계획 변경에 대한 환경부는 오판하지 말라

1. 환경부는 구룡사 진입도로 확장에 대한 공원계획 변경을 반려하라.

구룡사 진입도로 확장은 교행차량이 없는데 교행차량을 주장하고 있고 안전의 문제와 도로의 확장이 전혀 연관성이 없기에 구룡사가 주장하는 공원계획은 변경은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 또한 수목생태와 육수생태조차 이해하지 못한 보호대책은 보호대책이라고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

구룡사 진입도로의 확장은 생태계 보호대책도 없고, 사업의 필요성도 없는 사찰의 단순한 욕심에 불과하다. 사업구간 170미터는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한 구간이기에 교행이 필요하더라도 몇 초만 대기하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다.

환경부가 해당사업의 승인여부를 검토할 때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 증명하지 못하면 사찰의 단순한 욕심에 굴복한 반환경적인 정책을 추인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2. 치악산 국립공원내 구룡사 진입도로에 관련된 원주지역 갈등사례

구룡사가 치악산국립공원을 훼손하고자 하는 시도는 2003년 구룡사 화재 이후 소방도로 요구(2003년), 진입도로 확장 및 구룡사 주변 수목 벌채 요구(2004년), 탐방로 개설(2013년), 주차장 추진(2014년), 진입로 확장(2018년) 등 지속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지만 시민들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였다.

2014년 사설주차장 추진이 무산된 이후 조계종(조계사, 월정사, 구룡사, 원주환경운동연합)이 요구하여 치악산국립공원 상생협의기구를 구성했지만 구룡사가 이유 없이 중단하였다.

3. 공원계획 변경요구의 타당성(사업필요성)이 전혀 없다.

① 성수기 주말의 차량 300대, 석가탄신일 탐방객 1만 여명이라는 자료의 객관성이 없다.
- 활동시간으로 추산하면, 5분당 1대의 통행량이며, 교행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 평일 활동시간에 실제 관측한 결과, 1시간에 1대 정도의 차량이 활동한다.
- 석가탄신일의 탐방객은 일부 신도만 차량으로 구룡사까지 이동한다.
- 구룡사에 상주하는 인원이 소유한 차량의 이동을 위한 진입도로 확장 요구이며, 몇 사람을 위해서 국립공원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② 구룡사 매표소 ~ 구룡교 구간은 육안으로 차량이 파악되기에 교행 필요성이 없다.
- 필요시 몇 초간 대기했다가 이동하면 된다.

③ 구룡교부터 구룡사까지 교행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간이 2개소가 있기 때문에 교행을 위한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④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진입도로 확장은 타당성을 언급할 일고의 가치가 없다.

- 데크 아랫부분의 옹벽을 수리하기 위해 진입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없으며, 그냥 수리를 하면 된다.

4. 공원계획 변경에 필요한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는 권한을 넘어선 잘못된 행정이다.

- 황장금표는 매표소 맞은편에 있으며, 관련된 내용은 금강소나무에 대한 영향뿐이다.
- 하지만 강원도문화재위원회는 하천을 포함해서 심의를 했으며 이는 강원도문화재위원회의 권한을 넘는 사항이기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근거로 공원계획 변경은 부여된 행정권한을 넘어서는 잘못된 결정이다.
-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론으로 공원계획 변경의 근거나 자료로 제시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5. 금강소나무 보호대책으로 제시하는 이식 및 보식은 수목생태를 이해하지 못한 대책이기에 타당성이 없다

- 수목을 이식하면 80% 이상이 고사한다.
- 국립공원 내 수목을 이식한다는 대책은 수목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 계곡 내 활엽수의 보호대책으로 이식 또는 보식은 이식할 장소도 없고, 이식해도 고사하기에 보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수목을 죽이겠다는 얘기다.
- 금강소나무의 보호대책이 없다.

6. 어류 및 양서류 보호대책은 제시하고 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기에 타당성이 없다.

- 공사를 하면 어류 및 양서류가 피할 것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다.
- 해당 공사구간의 어류 및 양서류 조사가 없으며 피해 규모를 산정할 수 없다.
- 공사로 인해 탁류가 발생하면 오탁망으로 해결되지 않으며 해당구간 및 하류구간의 육수생태가 전멸의 상황으로 전개된다. 향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생태계가 복원될 것이다.

[성명서]

치악산국립공원(구룡지구) 자연생태계파괴, 구룡사는 진입로 확장공사를 철회하라

구룡사 진입로 확장공사 타당성없다. 환경부는 공원계획변경서를 반려하라

또 다시 구룡사가 치악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데 나서고 있다 구룡사는 치악산국립공원 구룡지구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는 매표소부터 구룡교까지 170m 구간에 대해 진입로를 확장하겠다고 환경부에 공원계획 변경을 신청하였다. 해당 구간의 공사를 위해서는 치악산국립공원내 하천에 중장비가 진입해야 하기 때문에 하천은 송두리째 파괴된다. 또한 해당구간은 구룡사에 정주하는 인원외에는 차량이용을 하지 않고 있기에 오로지 구룡사를 위해 치악산국립공원 파괴를 추진하고 있다.

진입로 확장공사를 반대하는 원주환경운동연합에 대한 저열한 로비를 중단하라 원주환경운동연합은 2003년 구룡사 화재사건 이후 치악산국립공원내 구룡사 진입로 확장공사를 지속적으로 반대해왔다. 개인과 사찰의 욕심으로 치악산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환경부는 치악산국립공원을 지키고자 하는 원주환경운동연합을 인정하여 구룡사에 환경단체와의 협의가 선결과제임을 적시하였고, 구룡사는 우리단체에 공사에 동의해달라고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은 협의요청이 아니라 매우 폭력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다.
조계종본사와 월정사의 집요한 압력전화, 월정사의 국회의원 후보자를 상대로 사찰진입 반대, 특히 동료 환경단체를 동원하여 협의요구 압력 등 구룡사는 나서지않고 원주환경운동연합의 관계망을 이용하여 압력을 행사하였다. 구룡사의 진입도로 확장요구가 정당하고 공익적이라면 이렇게 저열한 행동으로 일관하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한다.

자연생태에 무지한 보호대책을 제시한 구룡사는 공사계획을 스스로 철회하라 구룡사 소유 10여대 차량을 위해 공원내 170m 공사를 추진하면서 내세운 구룡사의 대책은 20여 그루의 수목을 이식하거나 보식하겠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식수목의 생존율이 20% 미만이기에 20여 그루의 수목을 죽이겠다는 말도 안되는 대책이다. 또한 어류 및 양서류의 경우는 공사가 시작되면 알아서 도망갈 것이기에 문제없다는 진단을 하였다. 한마디로 자연생태도 모르고 추악하고 욕심에 가득찬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환경부는 구룡사의 공원계획변경 요구서를 반려하라 원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에 진입로 확장의 타당성이 없고, 국립공원을 일개 사찰의 타당성 없는 요구로 파괴되기에 공원계획 변경 요구서를 반려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구룡사는 진입로 확장공사가 국립공원 보전에 하나도 도움이 안되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확장공사를 철회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원주환경운동연합은 국립공원 보전에 역행하는 어떠한 세력과도 타협없이 싸울 것임을 밝히며,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국립공원을 파괴하는 행동을 자행하지 않기를 촉구한다.

2018년 7월 19일
원주환경운동연합

[기고글]

민선7기, 개발과 성장의 관점에서 벗어나야

원주투데이 특별기고를 통해 원주시장님의 민선 7기 계획을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어 몇가지 단견을 드립니다. 우선 시장님의 3선 당선을 축하드리면서 압도적인 성원에 감사한다는 말씀에 일견 동의하지만 남북화해와 이를 이끌어낸 대통령의 통치력에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빠진 것이 아쉽습니다

“출산율 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이른바 인구절벽의 어려움이 원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진단하면서 “빨대효과를 대비하기 위해 관광산업이 필요”하고 이는 “높은 부가가치와 고용창출의 효과를 내는 전략적으로 추구해야 할 열쇠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고령사회가 되면서 걱정해야 할 것은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다는 고령의 시민들이 걱정을 덜 수 있는 노인복지분야를 확대하겠다는 표현이 선행되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일하는 사람의 부재’를 걱정하기보다 시민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되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을 제시하셨습니다. 190억원을 투입해서 치유의 숲과 루지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보면서 백운산 자락에 10개가 넘는 풍력발전기, 5개의 루지용 포장트랙, 많은 콘크리트 건물, 물도 없는 20층 건물높이의 댐 몸체를 상상하면 시장님이 말씀하신 ‘놀이터’가 과연 합당한지 되묻게 됩니다.

관광산업이라는 ‘폭주기관차’에 탑승한 거 같습니다. 원주시민들에게 ‘선택권’이라는 것은 없나요? 치유의 숲과 루지공원은 시비가 66억 5천만원이나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시민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간단한 설명회라도 진행하지 않고 추진하는 것에 많은 아쉬움이 듭니다. 더군다나 이 비용을 대중교통 활성화정책에 투입하게 하면 원주시민 절반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텐데 하는 생각에 더욱 아쉬움이 듭니다.

민간회사에 시비를 투입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 일견 동의합니다. 하지만 원주시의 실질적인 주인인 ‘시민’에게 묻고 토론하면서 그 해답을 찾는 방식을 기대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다니는 절반의 시민이, SRF열병합발전소를 반대하는 절반 이상의 시민이 개선을 요구하기에 소통과 합당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통의 부재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우리는 이미 지난 정권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소금산 출렁다리에 1천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했다고 하나 원주에 머물지 못하고 바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체류형 관광을 지원할 수 있는 다

양한 숙박시설과 관광객으로 파괴되는 소금산의 자연생태를 먼저 고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도 생각해봅니다.
관광산업이 필요없다는 얘기로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2~30년전 대규모 개발사업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려 했던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개발보다는 '재생'과 '지속가능'을 선택했던 군산의 근현대역사체험이나 전주의 한옥마을은 대규모 개발을 통해 성공했던 사례가 아닙니다.
시장님께서 "앞으로 4년 뒤 1천만 관광객이 찾는 문화관광제일도시, 그래서 일자리가 넘쳐나고 시민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풍요로운 경제도시"라고 경제제일주의를 표방하셨습니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우리는 자식들에게 돈이 최고가 아니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개발이 경제활성화라는 등식보다 자연과 함께,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재생'과 '복지', '삶의 질'이 우선되는 도시시스템을 먼저 고민하고 추진하는 시장님의 모습을 간곡히 기대해봅니다.

[제안서]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제안합니다

개별의 지역조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환경사안이 너무 많다

대표적으로 설악산 케이블카와 가리왕산 복원촉구 활동입니다. 전국적으로 연대해도 너무나 힘겨운 사안을 속고양환경연합과 원주환경연합이 주무하며 허덕이고 있습니다. 지역을 넘어 강원도 현안을 대처하는 조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환경연합이 없는 시·군의 환경사안은 대처할 수 없어 실제로는 거의 외면하고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광역단위의 환경운동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연합 강원협의회'가 있지만 활동공유와 대표와 활동가의 교류수준이기에 별도의 활동력이 부재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연합은 광역조직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이나 지원방안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할 환경단체가 너무나 부족하다

◦강원도에는 환경운동연합과 몇 개의 환경단체가 있지만 환경연합 이외의 단체는 관심이 적습니다. 얼마되지 않은 환경단체의 힘이 분산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강원도내 환경단체의 비세화로 나타나 설악산케이블카나 가리왕산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은 언론이나 강원도정에 한 줄도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적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협동조합 진영이 민감한 현안에 힘을 더해주지 않고 있으며 지방의제 및 시민단체도 환경사안에 대해 조직적 연대를 모색하는 것에 곤란함을 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환경운동연합이 지역으로 분산되어 있는 힘을 재구성해서 영향력을 키워야 한다

지역적으로는 2~300명에 그치는 작은 힘이지만 광역으로 재구성하면 1,000명이 넘는 회원과 70여명이 넘는 임원이 됩니다. 단체간 연대가 힘든 현실에서 이러한 통합역량은 장기적으로 협동조합이나 지방의제에 소속된 개별시민을 포함하는 네트워크(플렛폼)로 변화하는데 기초가 될 것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법인화(기부금대상민간단체)를 추진해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이 법인이 되면 각 조직은 법인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역량이 추가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중앙사무처가 담당하던, 아니면 광역에 두고 각 조직의

법인사무를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중앙사무처가 법인사무를 담당하는 체계는 지역의 자율성 감소, 관리소홀로 인한 법인의 취소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에, 장기적으로 광역조직을 활성화하는 측면과 강원도내 환경운동의 지속화를 위해서 **'이 참에'** 강원환경연합의 출발을 제안합니다.

강원환경운동연합 추진을 제안하며

◦지역조직 위에 형식적인 조직을 더하자는 것이 아니라, 분산된 지역조직의 역량을 재구성해서 강원지역 환경사안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환경을 중심으로 강원시민사회를 지탱하는 플랫폼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강원환경운동연합은 지역조직 외의 시·군의 회원을 독자 관리하고, 회원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여 영향력을 키우고, 지회의 조직이나 독자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성명서]

청산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평창군·횡성군 일원의 풍력발전단지 추진계획을 취소하라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진조리 및 횡성군 둔내면 삽교리 일원에 청산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은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 풍력발전소가 추진되는 주변지역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고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 지역이며 수십가구의 주민의 삶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풍력발전소 관리방침에 “정온시설이 있는 풍력발전단지 중 가장 가까운 풍력발전기로부터 500m이내의 경우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1.5㎞이상 제척”하라고 되어 있다. 이 방침은 풍력발전기로부터 1.5㎞이내에 민가가 있으면 안된다는 뜻이다. 하지만 청산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1.5㎞이내에 평창군 및 횡성군 주민 수십가구가 존재한다.

청산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이 지역은 2006년도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청산풍력은 이 사실을 숨기고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산사태위험등급 1등급 지역인 이 지역은 언제든지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지역으로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풍력발전단지는 해당 지역을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가 생산되면 인근 횡성변전소까지 보내기 위한 송전탑(전주)를 가설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 추가적인 산림과 지형이 훼손된다. 청산풍력은 사업계획에 이러한 사실이 언급하지 않은 기만적인 모습을 보였다. 풍력발전소가 위치하는 양쪽의 사면이 산사태 1등급위험지역인데 송전탑 등을 추가하게 되면 당연히 위험이 배가될 것이기에 풍력발전소 건설계획이 취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사실은 청산풍력이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예정지역은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이라는 것이다. 풍력발전단지 건설과정과 건설이후에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765kV 초고압 송전선로가 영향을 받아 정전으로 인한 국가재난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청산풍력의 풍력발전단지 추진계획이 취소되어야 한다.

2018년 10월 4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협의회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성명서]

한전은 송전탑 건설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산하라

지난 11월 5일,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가 주관하는 신울진에서 신가평까지 500HVDC 송전선로 서부구간 첫 번째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되었다.

우리는 서부구간 첫 번째 회의 중간에 퇴장할 수 밖에 없었고 독선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로 논의한 첫 번째 회의의 결과에 실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 해산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전력공사의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는 송전선로가 지나갈 수 있는 모든 구간의 이해당사자가 모여 권역대를 결정하고 세부적인 노선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전이 자체적인 규정으로 만든 위원회이다. 동부구간의 경우는 이미 권역대를 결정하고 서부구간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동부구간의 결정한 권역대에 대한 설명조차 듣지 못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동부구간이 결정한 지점에서 서부구간의 선로가 시작되기에 무조건 홍천이나 횡성지역을 지나가는 노선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신가평까지 모든 지역을 망라해야 특정구간을 선호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지역을 배제하였고 양평지역만 특수하게도 위원을 5명을 선정하여 특정지역의 이해를 반영하려는 작태를 보였다.

한전은 이러한 설명을 하지도 않은 채 규정논의와 위원장 선출을 강행하였고 이해가 부족한 일부 위원들의 찬성으로 한전이 원하는 방향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참으로 독단적이고 주민을 무시하는 행위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송전선로는 대규모 주민갈등을 불러올 수 있는 사안이며 이미 밀양이나 청도의 경우처럼 대규모 주민항쟁을 경험하였기에 다수의 합의를 모으고 신중한 논의와 결정으로 진행되어도 갈등을 봉합할 수 있다 자신할 수 없는 사안인데 이렇게 한전의 독단적인 강행은 파행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횡성송전탑건설 반대대책위원회는 동부구간 결정의 강요, 독단적인 위원장 선출, 일부지역에 편중된 위원 선출, 운영규정의 결정 강행 등 불합리한 진행을 이유로 회의를 퇴장하였고, 잘못된 결정으로 구성되고 운영되는 서부구간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한전이 신울진~신가평 500HVDC 송전선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논의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횡성송전탑선설 반대대책위원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한전의 독단적인 행태에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한다.

2018년 11월 7일

횡성송전탑건설 반대대책위원회

[기고글]

가리왕산 복원, 상식과 약속를 지키자는 기본이다

가리왕산 올림픽경기장 논란의 시작은 1999년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에 의해 동계올림픽이 추진되면서 시작되었다. 초기에는 유전자원보호구역의 개발은 없었지만, 개발예정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이 70%이상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이후 삼수도전 할 때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예정지는 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보호지역이었기에 경기장의 추진이 불가능한 땅 이었지만, 강원도의 의도적인 누락으로 올림픽 유치화일에는 언급되지 않은 사기행위가 자행된 셈이다.

2011년 평창동계올림픽이 확정되고 난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산지전용허가 과정에서 복원을 전제로 공사가 이루어졌고 올림픽이 진행되었다. 이는 환경부와 산림청, 즉 정부가 복원을 전제로 올림픽 추진을 허락하였고, 강원도 등 지방정부가 이에 동의하였기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런데 올림픽이 진행중인 2018년 1월에 동계아시안게임을 언급하면서 가리왕산 복원을 미루자는 제안을 최문순 도지사가 하였다.

동계올림픽 진행중에 이루어진 남북평화의 분위기를 자신의 정치권력을 위해 이용하는 후안무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강원도지사를 포함해서 강원도의 국회의원, 광역 및 기초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방앗간의 참새처럼 약속을 지키지말고 가리왕산을 영구히 파괴하자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 가리왕산에 대한 여러 논쟁이 있다. 복원을 하면 2차 환경훼손이 발생한다거나 활용을 하면 엄청난 경제효과가 있을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사실관계는 무엇일까?

첫째, 올림픽 경기를 치룬 가리왕산은 복원을 하던, 활용을 하던, 경사를 완화하고 재해에 대비하는 토목공사가 필요하다. 올림픽 전용경기장으로 만드는 과정에 안전상 조치와 시설구조를 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마치 복원을 하면 2차 토목공사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활용을 하면 2차 토목공사가 필요없는 양 호도하고 있다.

둘째, 강원도와 정선군이 생태관광지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볼거리가 없고 최대 경사도가 60° 가까이 되는 가리왕산에 곤돌라만 즐기러 가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이용할 사람이 없는 곤돌라 유지비용은 누가 낼 것인가? 지금으로서는 정선군이 내야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연간 15~20억원씩 20년 동안 수익없이 지출되어야 하는 비용을 합하면 400억원이 필요하다. 또한 스키협회에서 주장하는대로 국제경기장으로

유지하면 제설비용이 최소 500억원이 소요된다.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20년 동안 900억원 이상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충당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도 정부보고 내라고 할 것인가?

셋째, 철거비용만 '2000억'이라는 지역언론의 뉴스가 있었는데, 강원도가 산림청에 제출한 계획서에는 40억이 되지 않는다. 왜 철거비용을 50배나 부풀렸을까?

넷째, 가리왕산 생태복원추진단이라고 있다. 가리왕산 생태복원계획을 만들기 위해 강원도가 만든 기구로 강원도, 정선군, 정선주민, 시공사, 환경단체, 전문가, 환경부, 산림청로 구성되었고 4년동안 어떻게 복원을 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복원계획이 달라지기에 4년 동안 강원도에 활용화 계획을 요구했지만 강원도는 제출하지 못하다가 2017년 12월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완전복원으로 결정했다.

작년 12월 30일부로 가리왕산의 국유지 임대기간이 종료되었다. 최근 강원도가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을 저지하는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 언론에 발표되었다. 굳이 법적인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정선군 번영회 등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한 일이 아니라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주민들의 억지주장을 내세워 '복원해야 한다'는 국무총리실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함이라고 판단한다.

가리왕산을 복원하는 것이 왜 올림픽 유산이 되지 못할까? 올림픽을 위해 어쩔수없이 경기장을 만들었지만 올림픽 정신에 의해 전 국민이 노력해서 가리왕산을 복원하는 과정이 더욱 훌륭한 유산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단 말인가?

강원도의 가리왕산 복원계획에는 가리왕산 복원을 위한 거점이 없다. 올림픽 정신을 기리기 위해 가리왕산을 찾는 국민들이 평창동계올림픽 추진 20년 동안의 최대 사회갈등이었던 가리왕산 개발과 복원과정의 갈등, 그리고 복원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찾아오는 수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복원센터 추진을 가리왕산에 건설된 호텔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최소한 어처구니 없는 곤돌라 유지보다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가리왕산 올림픽경기장은 애초에 추진되면 안되는 사안이었지만, 그들의 얘기대로 어쩔수없이 진행했다고 한다면, 복원전에 약속했던, 그리고 법과 원칙이 정하는 대로 복원을 하자는 것이 억지주장이 아니라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키고 노력해야 할 원칙과 상식의 문제이다.

회원명부

2019년 1월 29일 기준 285명

강성태 강신범 강영태 강윤숙 강철규 강철식 계규민 계서연 계주홍 고미영 고복만 고유건
고유민 고정섭 고준희 공제욱 곽도영 국태호 권인석 권태원 권혁미 김갑태 김경석 김경준
김길선 김길중 김남형 김동섭 김동식 김동열 김동혁 김면래 김명숙 김문영 김미자 김범중
김법성 김봉일 김상복 김선기 김선동 김선희 김세현 김소연 김소영 김수경 김순희 김영길
김영무 김영미 김영재 김영주 김영철 김영태 김영하 김용우 김원철 김유환 김윤미 김응석
김익록 김익주 김재용 김정규 김정삼 김종남 김주원 김주택 김준연 김중배 김진열 김학배
김한수 김해경 김현자 김혜영 김혜정 김흥수 남수자 남원식 남은애 노병철 류관희 문규덕
문응기 민경성 민병승 민준영 박경희 박기군 박대일 박민규 박병섭 박성룡 박성수 박성현
박순덕 박애종 박양욱 박영금 박영길 박우순 박종만 박종현 박준길 박철우 배병호 배준형
배찬두 백귀헌 부상익 서연남 서용찬 석유진 석형근 성락철 손병용 송기헌 신동숙 신민환
신병식 신성주 신영철 신윤근 신혜숙 심상돈 안관수 안영숙 안종남 안찬희 안현주 엄광호
엄안섭 엄영철 엄태원 여봉규 여인수 오영환 오정윤 오제순 왕영희 용정순 용한수 원규희
원노연 원동진 원민규 원성문 유기형 유병헌 유종호 윤승호 윤용호 이광순 이광희 이광희
이기선 이남수 이동란 이동희 이명신 이명재 이무춘 이미숙 이미숙 이빈호 이선화 이성용
이소정 이시근 이연택 이영애 이영화 이영희 이용훈 이우세 이원겸 이유민 이은정 이은희
이인숙 이재영 이재인 이재홍 이재희 이정남 이정북 이정숙 이종붕 이 준 이준섭 이지민
이지원 이진술 이진우 이진하 이진희 이창선 이창열 이창재 이창호 이창환 이태구 이태희
이한진 이현주 이현직 이형표 이혜숙 이호용 임동이 임영수 임영희 임종태 임주열 임창숙
장금옥 장기향 장동영 장봉근 장소정 장승완 장연옥 장영민 장춘학 장택수 장화순 전보경
전부종 전수용 전숙희 전인귀 전재란 전정선 전중욱 정규원 정동우 정명자 정일선 정재일
정창기 정향화 제현수 조석곤 조윤주 조은자 조현숙 조호순 주용준 지석봉 지은희 지준근
진광장 진혜영 차경익 차민정 차봉익 차영배 채연희 최경희 최기식 최세일 최영희 최종천
최준길 최혁진 최현택 최흥식 한경호 한광덕 한은경 한재현 한지윤 한호연 함점순 현 각
홍동표 홍성태 황도경 황도근 황범순 황영호 황인수 황정욱 황지숙

비품내역

(2019. 1. 9. 기준)

번호	품명	기종 및 품번	수량	가격	구입년월일	비고
1	냉난방기	캐리어 CX-355F	1	2,490,000	2007.11	구입
2	컴퓨터	펜티엄(Pentium)4 1.6Ghz	1	2,250,000	2002.06	구입
3		조립식 컴퓨터	2	1,000,000	2013.09	구입
4		노트북 삼성 NT270E5V	1	760,000	2013.10	구입
5		LCD모니터 20인치	1			기증
6		LCD모니터 19인치	1	260,000	2007.05	구입
7		LCD모니터 22인치(삼성)	2			구입
8		LCD모니터 24인치	1	215,000	2015.01	구입
		LCD모니터 24인지	2			김은지 기증
9	프린터	삼성 LAZETT 4216F	1	487,000	2004.11	구입
10		삼성 MYJET 7000	1	140,000	2004.11	폐기
		HP프린터	1			임대
11	프로젝터	LG RD-JT90 (DLP)	1	1,900,000	2006.03	구입
12	무선앰프	MIPRO MA-707 (무선)	1	1,100,000	2006.06	구입
13	무선공유기	Anygate RG-3000A	1	80,000	2006.03	구입
14	전화기	일반 유선전화	5			기증(3대사용중)
15	책상	책상 120cm(흰)	1			김영규
16		책상 120cm(갈)	1			김영규
17		책상 80cm(흰)	2			김영규
18		강의실 책상	12	1,125,000	1997,2007	구입
19		차진열 책상	1			기증

원주환경운동연합 정관

--- 1993. 9. 21	제 정
--- 1994. 4. 23	1차개정
--- 1995. 3. 30	2차개정
--- 1996. 3. 21	3차개정
--- 1998. 2. 19	4차개정
--- 2001. 1. 20	5차개정
--- 2002. 2. 2	6차개정
--- 2003. 1. 28	7차개정
--- 2005. 1. 27	8차개정
--- 2006. 2. 8	9차개정
--- 2007. 2. 13	10차개정
--- 2008. 2. 11	11차개정
--- 2009. 2. 13	12차개정
--- 2010. 1. 28	13차개정
--- 2013. 2. 5	14차개정
--- 2017. 1. 19	15차개정
--- 2019. 3. 22	16차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06.2.8 개정)

이 모임은 원주환경운동연합(약칭 원주환경연합)이라 한다. 영문명은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s WONJU(약칭 KFEM WONJU)이라 한다.

제2조 (목적, 07.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생명·평화·참여를 중심가치로 삼아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힘을 합쳐 우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어 나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상, 06.2.8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환경연합의 원주지역 조직이다.

제4조 (소재)

원주환경연합의 사무실은 원주에 둔다.

제5조 (사업, 07.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
2)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사업
3)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연구 및 정책제시 사업
5) 환경피해지역과 지역단위 사업을 지원하는 제반활동
6) 환경권 침해에 대한 법률적 구조 및 대책사업
7) 국내외 환경단체 및 환경운동에 뜻을 같이하는 사회단체들과의 연대사업
8) 기타 환경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 (정당 및 정치활동 배제, 09.02.13 개정, 13.02.05 개정)

공동대표, 사무국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2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상실, 06.2.8 개정, 13.02.05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 및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2)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3) 회원은 연 3회 미만 회비 납부 시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4) 후원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가입하고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8조 (가입, 09.02.13 개정, 13.02.05 개정)

정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원주환경연합이 정한 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1회 회비와 함께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후원회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성하는 가입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 (권리와 의무, 05.1.27, 06.2.8 개정, 13.02.05 개정)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① 원주환경연합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 원주환경연합이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2)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3) 원주환경연합 내에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단 후원회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제10조 (상벌, 09.02.13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2) 원주환경연합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킨 회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조 직

제11조 (총회, 08.02.11, 09.2.13 개정)

1) 총회는 회원 전체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총회 성원은 제적회원 1/10 이상의 출석과 위임을 포함한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는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총회의 소집, 09.02.13 개정)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원 1/10 이상의 요청 또는 운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3조 (총회의 의결사항, 06.2.8, 09.02.13 개정)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할 수 있다.

1) 정관의 변경
2) 공동대표의 선출
3)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
4) 결원 운영위원 및 감사의 승인
5) 상근활동가의 임면의 승인
6) 감사, 사업계획, 예산, 결산의 승인
7) 원주환경연합의 해산의결. 단 이 경우 참석회원의 2/3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 기타 중요 안건의 심의 의결

제14조 (공동대표, 09.02.13 신설)

1) 공동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간의 소통과 협의를 위하여 공동대표단 회의를 둘 수 있다.
4) 공동대표 중 1인은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5) 상근활동가의 임면

6) 공동대표는 추천위원회에서 후보를 정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후보 선정의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7) 공동대표의 유고시, 운영위원장의 권한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잔여임기 동안 대행한다.(18.03.22 신설)

제15조 (감사, 09.02.13 신설)

1) 원주환경연합의 감사는 2인으로 하며, 임기는 2년이다.

2) 보선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며, 운영위원과 겸직할 수 없다.

3) 감사는 조직운영, 예·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운영위원회, 09.02.13 신설, 13.02.05 개정)

운영위원회는 원주환경연합 의결 및 집행기구로 구성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위원회는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선출직 운영위원과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3) 운영위원의 자격은 1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한 자로서 2명 이상 회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4) 운영위원은 추천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단, 회원모임은 1명 이상을 운영위원으로 추천한다. (17.01.19 개정)

5)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재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17.01.19 개정)

6)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부위원장을 선출할 수 있다. 단, 상근활동가는 제외한다. (10.01.28 개정, 18.03.22 개정)

제17조 (운영위원회 결의사항, 09.02.13 신설)

1) 회원가입·탈퇴의 승인

2) 추천위원회의 구성

3) 결원 운영위원, 감사의 선임

4) 상근활동가의 추천

5) 예산, 결산, 활동의 심의 및 집행

6) 회원모임의 결성승인 및 해산의 결정

7) 총회 상정의안 심의

제18조 (추천위원회, 09.02.13 신설)

1)원주환경연합은 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선출을 위해 10인 이내의 추천위원회를 총회 6월 전에 구성하여 총회까지 운영되며, 추천위원회의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공동대표, 운영위원,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 구성되는 추천위원회는 총회준비위원회가 되며 세부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9조 (고문 및 지도위원, 07.2.13, 08.02.11, 09.2.13 개정)

1) 원주환경연합은 지역사회에 덕망 있는 인사들을 중심으로 고문과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2) 원주환경연합은 연 2회 이상 고문, 지도위원회 정기모임을 통해 활동의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20조 (전문위원회, 07.2.13, 08.02.11, 09.2.13 개정)

1) 환경운동 및 조직발전을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들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전문위원회는 연 4회 이상 정기모임 및 임시모임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회는 정책 연구결과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상근활동가, 09.02.13 신설, 13.02.05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회원간 소통과 본회의 운영 및 사업집행의 지원을 위하여 상근활동가를 둔다.

1)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2) 3년 이상의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3) 활동가에 대한 처우와 임무, 직위는 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 (회원모임, 08.02.11, 09.2.13, 17.01.19 개정)

원주환경연합은 회원의 자발적인 환경운동의 참여를 위해 회원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1) 회원모임은 원주환경연합 회원으로 구성하며, 구성 및 운영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운영위원회에 승인된 회원모임은 1인 이상의 대표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23조 (의사결정, 06.2.8 개정)

당 회계연도에 월 회비를 6회 이상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제24조 (사업단의 설치, 13.02.05 신설)

원주환경운동연합의 목적을 위하여 영리활동을 하는 사업단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임시로 설치할 수 있다.

제4장 재 정

제24조 (회계년도)

원주환경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당해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5조 (재정운영, 09.02.13 개정)

원주환경연합의 운영은 회원들의 회비와 운영위원, 전문위원, 지도위원의 특별회비, 개인 및 단체의 후원금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개정시행, 08.2.11 개정)

1) 이 정관은 1994년 4월 23일 제1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1995년 3월 30일 제2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3) 이 정관은 1996년 3월 21일 제3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4) 이 정관은 1998년 2월 19일 제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5) 이 정관은 2001년 1월 20일 제8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6) 이 정관은 2002년 2월 2일 제9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7) 이 정관은 2003년 1월 28일 제10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8) 이 정관은 2005년 1월 27일 제12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9) 이 정관은 2006년 2월 8일 제13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0) 이 정관은 2007년 2월 13일 제14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1) 이 정관은 2008년 2월 11일 제15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2) 이 정관은 2009년 2월 13일 제16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3) 이 정관은 2010년 1월 28일 제17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4) 이 정관은 2013년 2월 5일 제20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15) 이 정관은 2017년 1월 19일 제24차 정기총회의 의결로 개정 시행한다.

원주환경운동연합 운영 세칙

--- 2006. 02. 08 제　　정
--- 2007. 02. 13 1차 개정
--- 2010. 10. 13 2차 개정
--- 2013. 02. 05 3차 개정

ㅁ 목　적

원주환경운동연합(이하 원주환경연합)의 운영의 효율화와 정관의 내용 중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운영세칙(이하 세칙)을 둔다.

1. 회원 및 회비의 구분

① 정회원의 구분(2013. 02. 05 3차 개정)

ㄱ. 회원은 공동대표, 감사, 운영위원,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ㄴ. 일반회원 이외에는 고문, 지도위원, 전문위원으로 구분한다.

ㄷ. 일반회원은 가족회원, 단체회원, 평생회원, 청소년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ㄱ, ㄴ, ㄷ을 제외한 회원의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회원가입에 대하여 심의 및 승인한다.

② 회비의 구분

ㄱ. 원주환경연합 회비는 통상적으로 월 10,000원으로 규정하며 회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그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10,000원 이하로 회비의 조정은 상근활동가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ㄴ. 가족회원의 회비는 월 15,000원 이상이다.

ㄷ. 청소년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이다.

ㄹ. 단체회원의 회비는 월 30,000원 이상이다.

ㅁ. 평생회원은 회비는 1,000,000원 이상이다.

ㅂ. 자료회원의 회비는 월 3,000원 이상이다.

2. 공동대표의 추천 및 선출에 대한 규정

① 공동대표의 자격

ㄱ. 공동대표는 3년 이상의 회원활동 경력이 있어야 한다.

ㄴ. 회원은 10명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 단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의 추천은 이에 대한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ㄷ. 정당의 당적을 갖고 있지 않은 회원

② 공동대표의 추천 공지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공동대표를 선출해야 하는 총회개최 전년도 10월에 공동대표 후보 추천에 대한 공지를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ㄴ. 후보 추천기간은 2주일 이상이어야 한다.

③ 공동대표 후보의 추천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자체 논의를 통하여 공동대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ㄴ. 회원의 공동대표 후보 추천은 공지된 기간안에 연명된 추천자 명단과 추천 의견서를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에 추천해야 한다.

④ 공동대표 후보의 논의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는 자체후보 및 회원이 추천한 후보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협의한 후 총회에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

⑤ 공동대표의 선출

ㄱ. 운영위원회(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공동대표 후보는 총회에서 소견을 발표하고 동의절차 후 선임한다.

⑥ 공동대표 후보 선임이 의결되지 않은 경우

ㄱ. 총회에서 공동대표 후보의 선임이 의결이 되지 않은 경우,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1개월 이내에 비상총회를 개최해야 한다.

ㄴ.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1개월 이내에 의장후보 선정을 완료하고 비상총회를 통하여 의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대표 추천기간은 1주일 이내로 한다.

3. 상근활동가의 처우와 임무에 대한 규칙

① 상근활동가의 자격

ㄱ. 상근활동가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공동대표가 임면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ㄴ. 실무자의 근무기간은 원주환경연합에 근무했던 모든 기간을 총합하여 규정한다.

② 상근활동가의 직위(2013. 02. 05, 제정)

ㄱ. 상근활동가의 직위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간사, 부장, 국장 등으로 임명할 수 있다.

ㄴ. 상근활동가의 직위 규정은 환경운동연합 전국사무처 규정을 대체로 따른다.

③ 상근활동가의 급여

ㄱ. 원주환경연합에 발령이 나면 8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ㄴ. 4대보험은 상근활동가가 부담하지 않는다.

ㄷ. 퇴직금은 사례의 형태로 형태로 지급하며, 월 5만원씩 단체에서 적립한다.

- 1년이상 3년이하는 마지막 급여의 100%를,
- 3년이상 5년이하는 마지막 급여의 200%를,
- 5년이상은 300%를 지급한다.

ㄹ. 상근활동가의 급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1년에 1회 조정이 가능하다.

4. 소모임의 운영

① 소모임의 구성

ㄱ. 소모임은 운영위원회 또는 회원이 필요 또는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결성 및 해산을 할 수 있다.

ㄴ. 상근활동가는 소모임이 결성 및 해산 사유가 발생하면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소모임 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소청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ㄷ. 운영위원회가 1년 이상 활동한 소모임의 활동을 심의결정하면 소모임의 회원 중 운영위원의 자격이 되는 1인이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ㄹ. 소모임 구성의 최소인원은 5명이다.

② 소모임의 해산

ㄱ. 소모임의 활동이 없거나 단체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경우 상근활동가는 소모임의 해산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ㄴ. 소모임의 해산이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경우, 소모임 구성원에게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및 설명의 기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한다.